

“DDP, 내실 다지려면 디자인 집착 말고 대중문화 품어야”

시의회 연구보고서

방문객 2018년 1060만명... 54% ↑
지난해 관람객 총 973만7119명
“유료관람객수 큰 비중 차지하지 않아”

서울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은 동대문 디자인플라자(DDP)가 방문객수 1000만명 돌파라는 표면적 성과 외에 운영상 내실을 다지려면 디자인이라는 제한적 이미지를 탈피하고 대중문화라는 폭넓은 콘텐츠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서울시의회의 ‘동대문디자인플라자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DDP의 방문객수는 2014년 688만3456명에서 2018년 1060만4794명으로 54% 이상 증가했지만 인근 상인들의 경기체감도가 낮고 동대문 상권이 높은 공실률을 기록하는 등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지 못하고 있다. 보고서는 “DDP에 관한 각종 조사 내



DDP 앞에 설치된 푸드트럭존 모습. /서울시

용을 보면 개관 이후 지속적으로 방문객수가 증가하는 등 외형적으로는 성공을 거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내부 전시나 이벤트를 찾는 유료관람객수는 전체 방문객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현재 서울디자인재단은 DDP의 정체성 유지와 독립적 수익창출이라는 상이한 목표 사이에서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분석했다.

동대문디자인플라자는 2014년 3월 개장한 복합문화시설로, 디자인과 관련된 전시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3차원 비정형 건축물로서는 세계 최대 규모이며 알림터, 배움터, 살림터 등 3개동으로 구성됐다.

‘DDP의 방문객수 현황 자료’를 보면 개관 첫해인 2014년 688만3456명에서 2015년 738만9535명, 2016년 800만

7681명, 2017년 923만7337명, 2018년 1060만4794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11월 기준)에는 총 973만7119명의 관람객이 DDP를 다녀갔다.

보고서는 “방문객수는 단순한 CCTV에 의한 집계방법이어서 내부 전시나 이벤트를 찾는 유료관람객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실제 DDP 1주년인 2015년에 파악된 유료관람객수는 총 방문객수의 10% 미만인 74만명 수준에 머물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DDP의 방문객수가 1000만명이 넘고 일평균 관람객수가 3만명에 육박한다는 통계자료가 있으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공간이라고 하기에는 내부 공간의 여유가 지나치게 많다”며 “특정 공간이 활성화됐다는 표현은 공간에 머무는 시간에 비례하지만 DDP는 공간을 지나치는 사람이 많은 뿐 이곳에서 제공하는 문화적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다고 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연구진은 현재 DDP가 비활성화된 이유로 전문가 창작공간이라는 제한적

인 공간 활용 방식을 꼽았다. 시민들은 DDP에서 전문가의 작품을 감상하고 일부 체험하는 수준의 소극적인 행동만 할 수 있으며 개인의 호기심과 자기계발, 커뮤니티와 취미 활동과 같은 적극적인 행동을 하기에는 많은 제약이 있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DDP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대중문화와 관련된 콘텐츠를 도입, 문화콘텐츠 창작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진은 “시민들이 심리적 장벽을 느끼지 않고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대중문화 콘텐츠를 반영할 수 있는 상시적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며 “최근 대중의 취향은 자신이 창작한 콘텐츠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기를 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Vlog로 대표되는 최근의 문화적 트렌드를 반영할 수 있는 공간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서는 콘텐츠 발굴, 제작, 교육(제작지원)과 같은 오프라인 운영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서울시-민주당, 청년당정협의회 첫 개최

청년문제 해결 위한 방안 모색
당정의 선제적 협력안 집중 논의

서울시는 20일 오전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대회의실에서 청년당정협의회를 처음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청년당정협의회’는 불평등, 세대갈등, 교육제도 개혁과 같은 청년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청년정책 추진의 유기적 협력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 자리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위원장, 임세은 서울시당 청년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경 서울시 청년청장, 문병훈 서울시당 청년위원장 등이 참여해 2시간에 걸쳐 청년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청년기본계획 수립을 뼈대로 한 청년기본법 제정 이후 서울시 조례 개정 등 후속 조치와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당정의 선제적 협력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서울시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은



박원순 시장은 20일 열린 ‘청년당정협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과 청년문제 대응·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서울시

청년당정협의회를 정례화하고, 추후 정책과 예산까지 논의의 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박원순 시장은 “청년기본법 제정에 따라 중앙정부 청년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기반이 마련됐다”며 “서울시도 청년의 공정한 출발을 위해 선제적 조치를 펼치겠다”고 전했다. /김현정 기자

북부간선도로에 축구장 4배 ‘콤팩트시티’

주변 지역과 소통하는 ‘도로 위 도시’
청년 가구, 신혼부부 위한 행복주택
공유 오피스, 청년 창업가 위한 시설
터널형 복개구조물 설치 소음 차단

서울 북부간선도로(신내IC~중랑IC) 위에 축구장 4배 크기의 대규모 인공대지가 놓이고, 공공 임대주택과 공원 등 주민편의시설이 생긴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는 20일 북부간선도로 상부 ‘콤팩트시티’(신내 콤팩트시티 공공주택지구) 국제설계공모 당선작 ‘연결도시’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당선작은 북부간선도로 상부에 축구장 면적의 4배에 달하는 약 2만7000㎡ 규모의 인공 대지를 만들어 공공 주택과 주민 편의 공간을 조성하기로 계획했다. 도로로 단절됐던 공간을 연결하고 주변 지역과 소통하는 ‘도로 위 도시’를 만든다는 목표다.

인공부지에는 청년 1인 가구와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 임대주택인 행복주택(청신호 주택) 990세대와 세탁실·공용



터널·운동실을 갖춘 주민공동시설이 들어선다. 또 보육·문화·체육 등 생활편의 시설이 연면적 1만1400㎡ 규모로 만들어지고 반려견 놀이터·산책로·캠핑장으로 이용 가능한 공원(숲 파크)도 생긴다.

북부간선도로 옆 부지는 청년창업공간, 공유오피스, 청년 창업가를 위한 임대주택인 도전숙 등 청년창업 시설(연면적 약 1만3500㎡)로 변신한다.

당선작은 도로 소음과 진동을 최소화하기 위한 최적의 구조와 공법을 제안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도로를 감싸는 ‘터널형 복개구조물’을 설치해 북부간선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원을 원천차

단한다. 도로에서 생기는 진동의 영향이 주택에 미치지 않도록 도로와 건축구조물을 완전히 분리하는 방식인 ‘브릿지 시스템’을 적용한다. 브릿지 시스템은 도로 위에 일종의 다리를 놓는 방식이다. 도로 양옆으로 도로와 직접 닿지 않는 대형 기둥(RC코어)을 세우고 기둥 사이에 상부의 하중을 안정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트러스 구조물을 설치한다. 그 위에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경량 모듈러 주택을 지어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당선법인 포스코A&C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권이 주어진다. 시는 내년 하반기 착공해 2024년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박원순 시장은 “도로 위 콤팩트시티라는 이전에 없던 새로운 유형의 공공주택 모델을 도입해 북부간선도로로 단절되고 고립됐던 신내IC 일대를 주거·여가·일자리가 어우러진 자족 도시이자 중랑구의 중심생활권으로 탈바꿈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돌봄SOS센터, 5개월만에 서비스 1만건 넘어 (서울시)

서울시는 ‘돌봄SOS센터’ 시행 5개월 만에 1만건이 넘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했다고 20일 밝혔다.

돌봄SOS센터는 갑작스러운 질병과 사고로 긴급하게 가사·간병이 필요한 경우부터 병원 동행 같은 일상적 도움까지 돌봄이 필요한 시민 누구에게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 거점이다. 사회복지직과 간호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전담인력 ‘돌봄매니저’가 센터마다 배치돼 장애인과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방문 요양, 건강 상담, 식사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돌봄SOS센터는 지난해 7월부터 성

동·노원·은평·마포·강서 등 5개 자치구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센터를 통해 시는 2019년 7월 18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1만102건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시는 올해 7월부터 8개 자치구에 돌봄SOS센터를 추가로 열어 총 13개 구로 서비스 범위를 확대한다. 그동안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됐던 만 50세 이상 중장년 가구를 지원 대상에 추가한다. /김현정 기자



서울시 “탄천변 동측도로 지하화... 교통량 분산 필요”

동남권역 대규모개발로 교통혼잡
유수지 공간 이용, 진·출입로 확보

서울시는 동남권 지역의 교통량 분산을 위해 탄천변 동측도로를 지하화한다고 20일 밝혔다.

탄천변 동측도로는 송파구 삼성교차로에서 탄천우안도로 연결구간까지 약 4.9km이다.

시는 제방 도로와 제방 하단 도로가 뒤섞여 복잡한 구조로 된 이 구간을 지하화하면 현재 송파대로로 몰리는 교통

량을 분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위례신도시, 국제교류복합지구(MICE) 등 동남권역 대규모 개발로 인해 송파대로로 집중되는 교통량 분산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시는 간선도로와 지선도로의 연결과 지역주민 편의를 위해 유수지 공간을 이용, 진·출입로를 확보할 계획이다. 통과교통과 생활교통을 분리하기 위해 주요 구간은 왕복 4차로 지하차도로 만들고 기존 제방도로에는 산책로 조성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타당성 조사와 기본설계 수립 용역을 이달 중 완료하고 한 국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 검토를 의뢰할 방침이다. 시는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 투자심사 등 관련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내년에 기본설계에 들어갈 계획이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격자형 간선도로망 구축으로 도로 연속성 확보 및 지역 간 접근성이 향상되고, 통과교통과 생활교통 분리로 안전한 교통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